

“빅10산업 육성” vs “확률형 아이템 공개”…李-尹 정책 경쟁

이, 반도체·로봇 등 모태펀드 조성,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육성
윤, e스포츠 연고제 도입 등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 4가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와 청년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 경쟁’을 펼쳤다. 이 후보는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고, 윤 후보는 게임 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자·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산업을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빅10 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

가 양성하고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 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지정·관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중국·신남방·유럽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미 산업기술 대화 정례화 등이 추진 과제로 꼽혔다.

이 후보는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2029년까지 5년 연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온라인 게이머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항을 해결해 게임의 주 이용층인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 캐릭터를 꾸미거나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장비인 아이템을 옛날 문방구에서 하던 ‘장난감 뽑기’처럼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아이템은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나올 가능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이 매우 희박한데도 게임회사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수시로 바꾸기까지 해 작년 게이머들이 트러블 시위와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됐다.

윤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회사에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게이머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게임업계 자율규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법제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어떤 상품도 공정 거래를 위해 상품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게이머들이 아이템을 서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사기도 뿌리 뽑겠다고 했다.

게임사기는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

역연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프로야구처럼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윤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인식차가 큰 대표적 분야가 게임”이라며 “게임을 질적으로 보던 기존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安, 단일화 거리 두고 홍준표에 가까이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서 꺾속말
홍의원 2030 지지세 어필 의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대해 적극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에는 관심없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을 대하는 싸늘한 기류와는 대조적이다.

안 후보는 지난 3일 대구 북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2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행사에서 홍 의원과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두 사람은 언론 앞에서 활짝 웃으며 두 손을 맞잡고 대화했고, 홍 의원은 안 후보에게 꺾속말을 건네며 친밀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며칠 전에는 안 후보 측근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신년 인사차 의원회관에 있는 홍 의원을 찾기도 했다. 15분 남짓한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대선정국의 변수로 꼽히는 ‘안철수-홍준표 관계설정’과 맞물려 이목이 쏠렸다.

정치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주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안 후보 테마주와 홍 의원 테마

주가 ‘한 묶음’으로 여겨지는 흐름 탓이다.

이달 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산을 발표하고 야권 일각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불거지자, 안 후보와 홍 의원 테마주가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어 작년년부터 이미 홍 의원에 대해 꾸준히 ‘공개 구애’를 펼쳐왔다.

지난달 안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의 ‘정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찰스형’이란 아이디로 글을 올린 게 대표적인 장면이다.

당시 안 후보는 “왜 청년들은 홍준표 의원님을 좋아하고 열광할까요?”라는 제목의 질문을 하면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안철수(찰스형) 올림”이라고 적었고, 홍 의원이 답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가 홍 의원에 대해 적극 다가서는 배경에 대해선 홍 의원의 2030 지지세를 짚는 해석이 주로 거론된다.

2030 표심이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홍 의원과 우호적인 관계

를 형성해 청년층에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향후 야권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경북(TK) 조직표를 가진 홍 의원과 접점을 만들어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홍 의원 역시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윤 후보에 비해 안 후보에게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그러나 안 후보는 ‘과잉 해석’이라고 손을 저었다.

안 후보는 12일 오전 인천에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과 대선 레이스에서 정치적 공조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이 다른 그런 상황 아니겠냐. 지금 저는 국민의당 선거운동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외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를 상시 운영하고,

윤리특위 구성 개편을 통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로 정해진 ‘출석 정치’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명백한 허위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혁신위의 주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등 77명 민주당 복당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생당 등에 몸담았던 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77명이 12일 복당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희동 전남도의원(진도)을 비롯한 8명의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으로 돌아가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무엇보다 5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복당을 선언한 77명은 다수가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탈당한 전남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19대 대선 전후로 부득이하게 당을 떠난 후부터 5년여의 시간은 국민의 위대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복당선언은 민주당이 오는 17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는 탈당자 일괄 복당 허용 조처에 따른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